

배포일 2009년 6월 1일

동아시아연구원(EAI · <http://www.eai.or.kr>)과 한국리서치(<http://www.hrc.co.kr>)는 2009년 2월부터 매월 여론바로미터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 23일 19세 이상 전국의 남녀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CATI)결과를 보내드립니다.

[테마조사] 주제

여론으로 본 정치적 무드와 여야 정당이념기반 분석

[현안조사] 주제

- I. 대법원의 존엄사 인정 판결에 대한 입장
- II. 정부의 도심 대규모 집회 불허방침과 불법/폭력시위 심각성 인식
- III. 미디어관계법의 주요내용에 대한 인지여부와 찬반입장
- IV.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에 대한 정책방향 인식
- V. 정부의 10시 이후 학원수업 금지 계획 백지화에 대한 입장

[추적조사] 주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정국변화 조짐



- 내용문의 EAI 정한울 부소장 (02-2277-1683/018-280-3230/hwjeong@eai.or.kr)
EAI 정원철 선임연구원(02-2277-1683/017-279-4536/cwc@eai.or.kr)
- 조사문의 한국리서치 김춘석 수석부장 (02-3014-0082/016-9525-8416/cskim@hrc.co.kr)

I. 테마조사

여론으로 본 정치적 무드와 여야 정당이념기반 분석

: 일반국민과 정당 지지층 여론 비교

정치적 무드의 변화와 여야의 정당이념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주요정당의 이념적 정체성 논란이 뜨겁다. ‘실용노선’을 내건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당내외 보수진영으로부터 이념적 정체성에 대한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통합민주당 역시 당 지도부가 당 개혁의 일환으로 내놓은 성장노선을 강조하고 맹목적인 반대 대신 대안제시에 주력한다는 ‘뉴민주당 플랜’ 초안을 제출하면서 주류, 비주류간 이념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현재 당내 분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각 정당의 이념적 자리잡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 정당의 지지기반 및 일반국민들의 이념적 지향에 부합해야 한다. 과연 소위 집토끼, 산토끼는 어떤 이념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각 정당의 이념정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살펴본다.

1. 정치적 무드 변화

- 이명박 정부 전후 정치적 무드(political mood) : 보수축소 · 중도 확대 · 진보의 완만한 회복

2007년부터 EAI가 실시해온 여론조사에 스스로의 이념성향을 물어본 질문결과를 정리해보면, 한국인의 이념성향은 정치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이념성향이 크게 변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2007년은 ‘참여정부에 대한 심판론’과 ‘경제 살리기 이슈’가 대두되면서 4월 조사에서 28.0%에 불과했던 보수층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의 높은 지지율과 함께 고공행진을 거듭하여 2008년 2월 대통령 취임을 앞둔 시점에서는 무려 45.0%까지 상승한다.

그러나 인수위 시기, 내각 인선 과정, 특히 5~7월 촛불시위로 정치적 위기를 겪으면서 보수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되면서 보수적 이념층은 2008년 9월 조사에서는 33.2%로 줄어들고 이번 조사에서는 29.8%까지 내려앉았다. 보수의 축소는 중도층의 확대와 위축된 진보층의 완만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중도층은 2007년 보수층의 증가에 반비례해 29.1%까지 축소되었다 보수층이 감소하면서 꾸준하게 상승하여 41.8%까지 상승하였다. 진보층 역시 2007년 10월까지의 축소되다 이명박 정부 이후 완만하지만 꾸준하게 상승하는 추세다. 이번 조사에서 28.5%로 전달에 비해 약간 줄어들면서 주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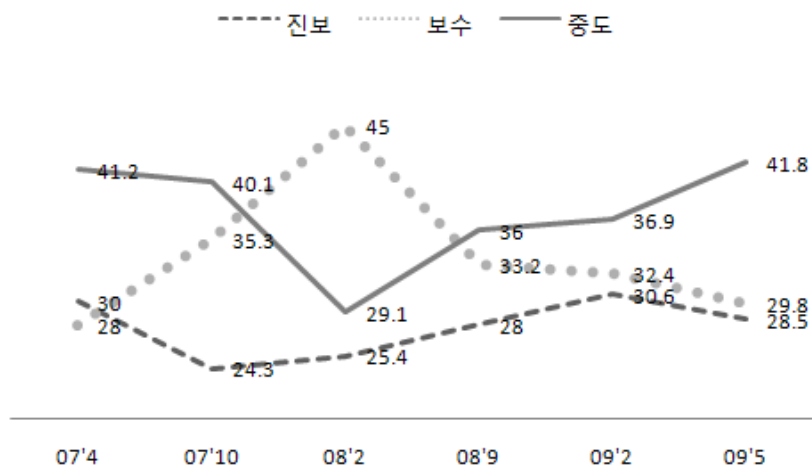
한국에서의 이념적 분위기는 정치사회적 환경변화와 연관되어 움직이고 있으며 중도층의 확대와 보수층의 약화, 완만한 상승세에서 주춤하는 진보층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무드는 지난 4.26 보궐선거의 5:0 집권여당의 참패 이후 당정비 활동 및 기사화생한 민주당의 당 개혁 움직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온 것으로 보인다. 이들 주요 정당의 당 정비 혹은 개혁 활동의 주요 축은 당의 이념적 정체성

I. 테마조사

을 확립하는 데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에서 50%를 넘나들면 정당지지율이 30%대 전후로 떨어졌고, 민주당은 최근까지 20%에 못 미치는 낮은 지지율로 당 위기론이 확산되어 있다. 보궐선거를 전후 표출된 내분을 봉합하고 조직 및 체계정비가 당 혁신의 한축이라면 당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당의 이념과 정책에 대한 재정비가 다른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이념적 위치에 대한 전체 국민 및 지지층의 평가와 기대가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두 정당의 이념적 자리 찾기 과정에서 직면할 문제와 과제를 살펴보고 이들이 고려해야할 정치적 의미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1] 2007-2009년 이념집단 규모 변동(%)



주 : 모름/무응답은 제외

2. 현재 양당의 이념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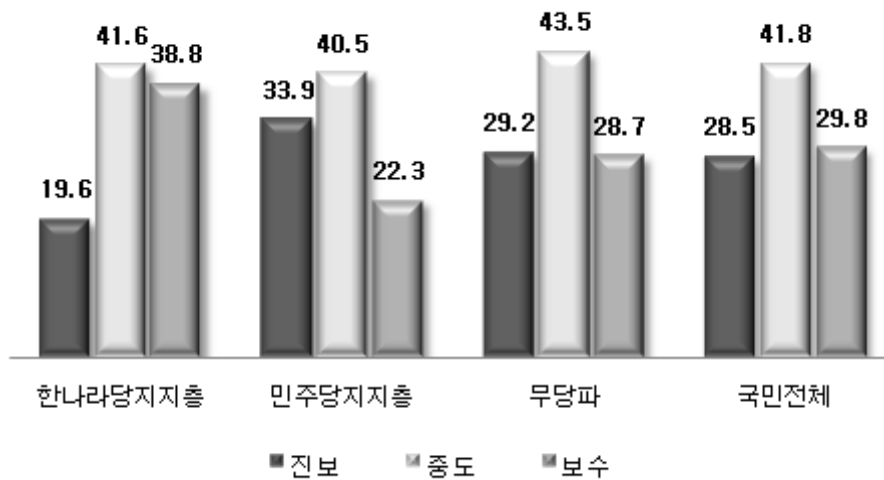
- 보수는 한나라당, 진보는 민주당의 주요기반, 결국은 중도층 흡수경쟁으로 귀결
- 한나라당 지지층 : 중도 + 보수, 민주당 지지층 : 진보 + 중도
- 무당파 및 전체국민들 사이에서는 중도 우세 가운데 진보, 보수 성향 팽팽한 상황

이번 조사에서 국민전체를 주관적 이념성향에 따라 분류해보면 중도층이 41.8%로 가장 많았고, 진보층이 28.5%, 보수층이 29.8%로 진보 및 보수 비중이 팽팽하다.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의 당선을 거치며 스스로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층이 급증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상당한 변화다. 한나라당 지지층 중에서 중도층 41.6%, 보수층은 38.8%, 진보층 19.6%로 구성되고 있다. 중도보수성향의 정당답게 중도층과 보수층의 비중이 크다.

I. 테마조사

반면 민주당은 중도층 40.5%와 진보층 33.9%로 이들 두 집단의 비중이 크다. 민주당 지지자 중 보수층은 22.3%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파의 경우 전체 국민들의 이념분포처럼 중도가 다수(43.5%)를 이루는 가운데 진보층 29.2%, 보수층 28.7%로 팽팽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지기반이 이념성향에 의해 뚜렷하게 갈라지는 상황은 각 정당이 탈이념, 실용주의 개혁을 외쳐도 각 정당이 이념적 스탠스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음을 시사한다.

[그림2] 전체 국민 및 주요정당의 이념적 기반(%)



주: 모름/무응답은 제외하고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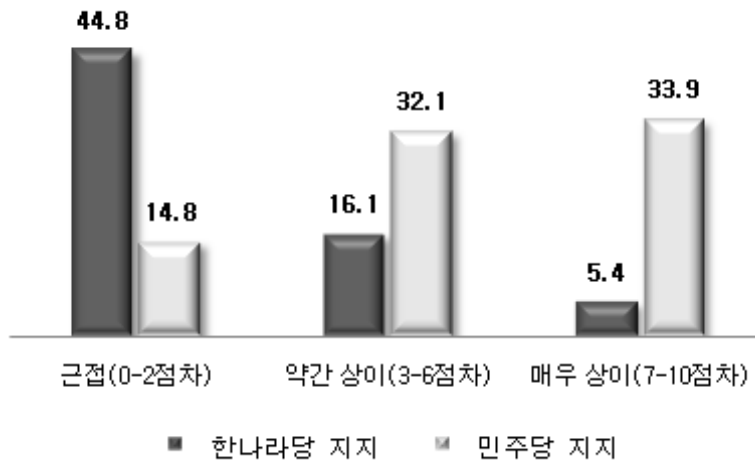
- 지지정당 선택에서 이념적 근접성(ideological proximity)이 중요한 이유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되듯이 특정 정당이 표방하거나 외부에 비쳐지는 이념적 위치와 성향이 국민 개개인의 이념적 위치와 성향과 가까울수록 지지를 받게 되는 경향을 보여 준다. 국민 다수의 이념적 색채와 성향과 근본적으로 거리가 있는 정당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어렵다. 따라서 정당이 지지기반을 확대하고 지지층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다수 국민과 자신의 지지층이 바라는 이념적 성향에 맞추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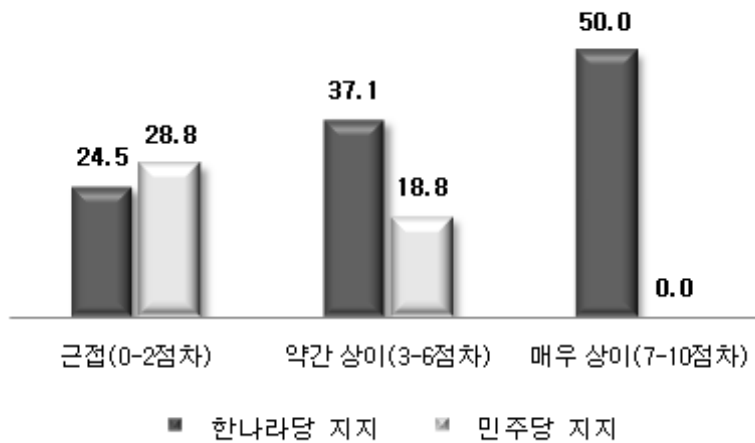
실제로 자신의 이념성향과 한나라당의 이념성향이 유사하다고 보는 사람들에서의 한나라당 지지율은 44.8%, 약간 차이가 나타나거나 매우 차이가 있다고 보는 사람들 중에서는 한나라당 지지율이 각각 16.1%, 5.1%로 급감한다. 반대로 민주당의 이념성향과 자신의 이념성향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고 느낄 경우 민주당 지지율은 28.8%다. 약간 거리감이 있다고 답한 층에서는 18.8%만 민주당을 지지했다. 상당히 거리감이 있다고 보는 층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는 전혀 없었고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림3], [그림4] 참조). 이러한 근접성 모델은 유권자들의 이념적 변화가 어떻게 정당 경쟁 구도의 변화로 반영되는지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I. 테마조사

[그림3] 한나라당과 응답자의 이념적 거리와 정당 지지율(%)



[그림4] 민주당과 자신의 이념성향 거리와 정당 지지율(%)



I. 테마조사

3. 국민의 자기이념 변화가 정당 이념에 미치는 영향

이제 이러한 국민내부의 증도 및 탈이념적 수렴현상은 양 정당의 이념과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이동시키는 힘으로 작용할 것인지, 결과적으로 양 정당 간 경쟁을 약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할 것인지, 또한 각 당 이념 재정비 노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5월 정기조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 국민은 증도로의 수렴현상 뚜렷 : 2007년, 2008년 5.5 → 2009년 5.1로 증도화

조사결과 국민들 내부의 이념갈등은 줄어드는 대신 정당간 이념갈등의 소지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한나라당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층 이념성향의 격차보다 국민들의 눈에 비친 여야 이념성향 사이의 격차가 크다. 민주당 지지층과 한나라당 지지층의 이념적 성향을 평균으로 살펴보면 2009년의 경우 민주당 지지층과 한나라당 지지층 사이의 이념적 갭은 2007년 1.5점(민주 4.6점, 한나라 6.1점)이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0.7점(민주 4.9점, 한나라 5.6점)으로 줄어들었다. 국민들 사이의 이념적 수렴현상은 이전 정부 기간 동안 이념적 갈등이 오랫동안 심화되면서 느끼게 된 이념적 피로도와 경기체감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경제우선론이 부각된 현상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림5] 일반국민/한나라당-민주당 지지층 이념성향 변화와 양당 이념성향 평가 변화(2007-2009년)



주 : 0점은 매우 진보, 10점은 매우 보수, 5점을 증도로 한 응답자 자신의 이념성향 평가 응답 평균

- 한나라당-민주당 이념적 갭은 크게 줄지 않아
- 민주당은 '우향우' (4.6→4.9), 한나라당은 큰 이동 없어(6.5→6.4)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야 지지층에서 이념적 격차가 줄고 있지만 두 정당의 이념적 간극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들이 본 민주당 이념적 성향(4.8점)과 한나라당 이념적 성향(6.4점)의 간격은 1.6점으로 여전히 큰 이념적 격차를 체감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눈에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취하고 있는 이념적 위치가 다소 줄기는

I. 테마조사

했지만 여전히 큰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건 민주당이건 당이념과 정책의 재정비 과정에서 보다 국민들과 가깝게 가겠다는 목소리가 아직 현실 속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4. 정당 이념 재정비 과정에서의 고려사항과 과제

전체국민과 지지층이 선호하는 정당의 이념성향이 동일하면 정당의 이념이동 추진력으로 작용하지만 양자가 엇갈릴 경우 해당 정당의 경우 딜레마상황에 놓이게 된다. 일반국민과 해당 정당 지지층이 생각하는 정당의 이념성향이 일관 되는가 또는 상호 충돌하는 가는 특정정당이 어떠한 이념적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된다. 일반국민 및 각 정당 지지층의 이념선호 변화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것이 각 당이 추진하고 있는 당 이념 정책 정비 과정에 어떠한 과제를 던져주는 지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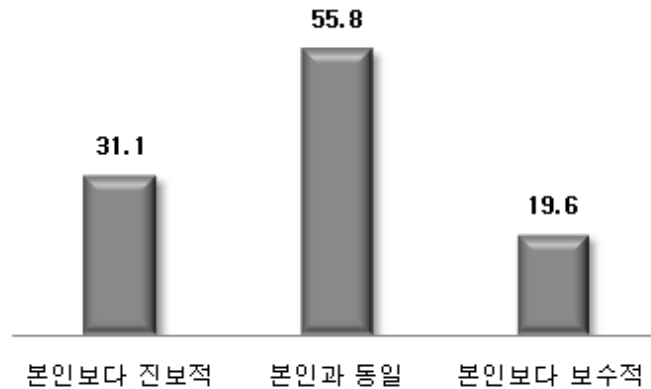
- 일반국민의 중도로의 수렴 압력 : 한나라당에 대한 좌향좌, 민주당에 대한 우향우 압력

일반국민들은 한나라당이 본인과 이념적으로 동일한 위치에 있다고 볼 때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아 55.8%까지 기록하고 있다. 본인보다 진보적이라고 볼 때는 31.1%의 지지율을 기록하여 본인보다 보수적이라고 느낄 때 지지율 19.6%를 상회한다.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자신의 이념성향이 일치한다고 볼 때 한나라당 지지율이 증가하고, 자신보다 보수적인 방향에 있기 보다는 진보적 위치에 있을 때 보다 지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여론은 한나라당이 이념적으로는 보수 쪽에서 가장 응답자들이 포진하고 있는 중도로 방향 선회하라는 압력이 될 것으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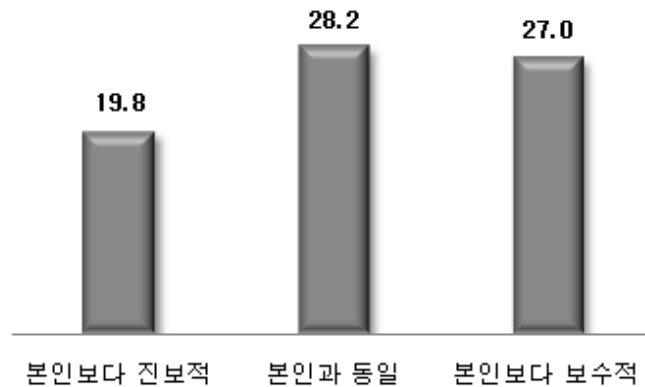
반면 민주당의 경우도 본인과 동일한 이념적 위치에 있다고 볼 때 민주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지만(28.2%), 본인보다 진보적이라고 인식할 때보다(19.8%) 보수적이라고 느낄 경우 보다 높은 지지(27.0%)를 받고 있다. 일반국민의 여론은 민주당에게는 다수 국민들이 포진한 중도로 이동하라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치적 무드가 2007년 보수화에서 2008년을 거치면서 나타난 중도층의 확대 분위기가 각 정당에 대한 이념적 이동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 테마조사

[그림6] 본인과 비교한 한나라당의 이념적 성향과 한나라당 지지율(%)



[그림7] 본인과 비교한 민주당의 이념적 성향과 민주당 지지율(%)



- 상반된 정당지지층의 압력
- 한나라당 지지층(5.6점)은 한나라당에 보수주의 완화 원해
- 민주당 지지층(4.9점)은 민주당에 진보적 선명성을 주문

한나라당 지지자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은 각각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현 수준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의견이 많지만 이념적으로 보다 좌측방향, 즉 진보적 성향으로 이동하기를 바라는 응답비율이 보수적 방향으로 이동하기 바라는 여론보다 높다. 전체적으로는 진보적 방향으로 이동하라는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 지지자 200명 중 현재의 이념적 스탠스에 만족하는 비율이 45.8%지만 좌측으로 이동하라는 압력이 34.1%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라는 여론 20.1%를 상회한다. 민주당 지지자 156명의 응답을 봐도 현상유지하라는 응답이 39.3%로 많았고 다음이 진보적 방향으로 이동하라는 응답으로 34.6%에 달했다. 보수적 방향으로 이동하라는 요구는 26.1%였다. 일반국민 여론과 달리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중도보수화 보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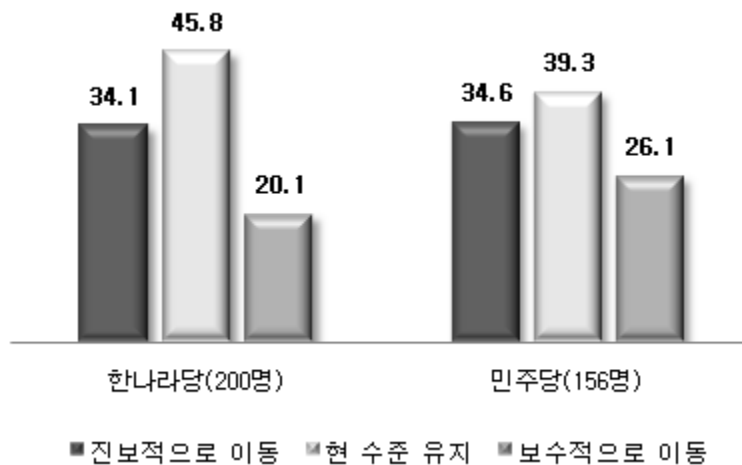
I. 테마조사

상대적으로 진보적 방향으로 이동하라는 응답이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점수로 보면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현재 한나라당의 이념위치를 평가할 때 10점 만점에 6.0점(10점에 가까울수록 보수, 5점 중도, 0점에 가까울수록 강한 진보)을 주었다. 그러나 바람직한 한나라당의 이념성향에 대해서는 5.5점을 주어 한나라당 지지층의 평균 이념위치인 5.6점과 근접하라는 요구다. 이는 지지층의 이념성향에 맞게 보수선명성 보다 완화된 보수주의를 지향하라는 주문으로서 근접성 모델로 설명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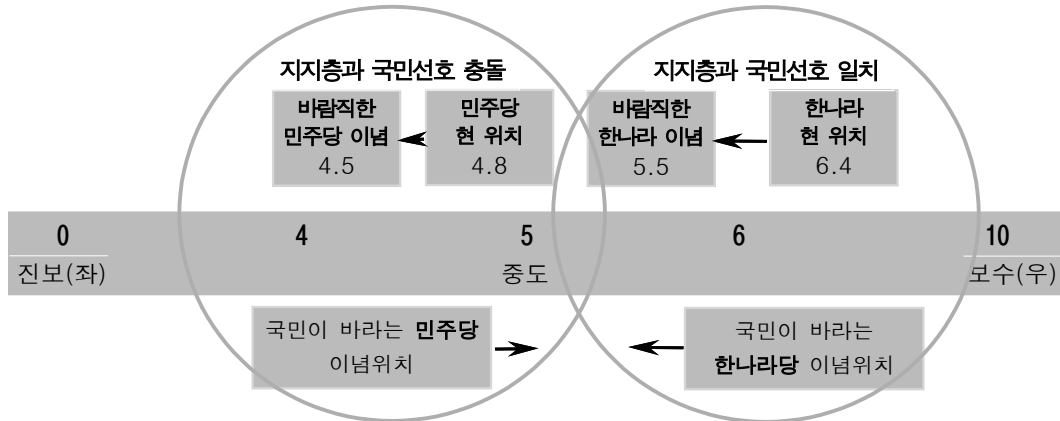
반면 꾸준하게 중도적 위치로 이동하여 민주당 지지층(평균 4.9점)에서 현재의 민주당 이념위치를 4.8로 거의 중도에 근접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민주당이 취했으면 바라는 이념적 스탠스는 오히려 4.5점으로 보다 진보적인 성향을 요구하고 있다. 자신의 이념성향과 거리가 벌어지더라도 좀 더 분명한 진보성향을 지향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근접성 모델 보다는 특정 이념성향의 방향을 분명할 때 지지를 획득하게 된다는 방향성 모델이 보다 적절한 설명 모델처럼 보인다.

[그림7] 한나라당 및 민주당 지지자의 지지정당 이념적 스탠스 변화 (%)



I. 테마조사

[그림8] 한나라당 및 민주당 지지자의 지지정당 이념적 스탠스 변화 (점수)



5. 요약

- 한나라당, 일반국민 및 지지층의 일관된 보수주의 완화 압력
- 민주당, 일반국민과 지지층 사이의 상충된 요구, 당 이념 정비의 최대난관으로 작용

종합하면 한나라당의 경우 일반국민이나 정당 지지층에서 공히 현재보다는 중도 쪽으로 이동하라는 공통된 압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에서 일반국민 및 정당 지지층으로부터 제기되는 보수주의의 완화 목소리가 한나라당의 개혁 움직임에 일단은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보수주의적 이념성향이 뿌리 깊게 남아있고 현재 당내 계파 문제나 당정 협력체제 구축이 최우선 과제가 나오고 있는 조건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당 정비작업이 주로 계파 간 갈등 봉합문제에 집중되고 있는 데 이 과정에서 국민들 및 당 지지층에서조차 기대하는 당 이념 정비작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곤혹스러운 것은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4월 재보궐선거에서 나름의 선전과 원내대표 선거를 거치면서 나름의 활력을 얻고는 있지만 국민전체여론과 지지층 여론이 상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현재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이념 현대화 혹은 이념정체성 찾기 움직임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빠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전체 국민들의 경우 현재 보다 중도 방향으로 이동하라는 여론이 큰 반면 지지층에서는 보다 진보적 색깔을 내라는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강하다. 이를 반영하여 민주당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념적 정체성과 관련한 논쟁에서 보다 분명한 이념적 색깔을 내서 소위 지지층의 결집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과 폭넓은 국민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중도우경화가 필요하다는 뉴민주당 플랜을 둘러싼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 집토끼와 산토끼의 생각이 다른 상황에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묘안을 찾아낼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 된다.

II. 현안조사

대법원의 존엄사 인정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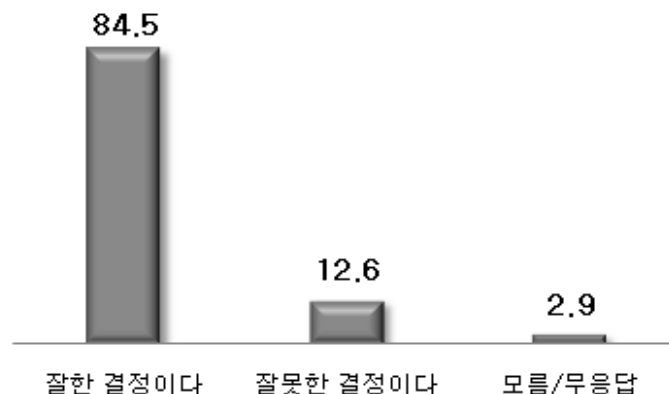
: 잘한 결정이다 84.5% 잘못된 결정이다 12.6%

사회집단별 인식편차 없이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합의 존재

지난 5월 21일 대법원은 말기 암 환자인 김 모씨 측이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 제거 등, 즉 ‘존엄사 허용’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1, 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할 때는 연명치료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 존엄을 해치므로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인간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환자는 사전의료지시서 등의 방법으로 미리 의사를 밝힐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평소 가치관, 신념 등에 비춰 객관적으로 환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연명치료 범위에 따른 안락사와 존엄사의 구분, 본인의 의사결정권의 범위, 회복 불가능한 사망단계에 대한 기준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생명존중 사상의 훼손이나 경제적 이유로 발생하는 존엄사 남용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번 결정에 대한 종교적, 철학적 논쟁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논란까지 가중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존엄사(또는 일반적 의미의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긍정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5월 EAI HRC 여론바로미터 조사결과는 우리 국민들의 83.5%가 이번 대법원의 결정을 잘한 결정(매우 잘한 결정이다 37.4% + 대체로 잘한 결정이다 47.1%)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잘못된 결정이라는 응답비율은 12.6%(매우 잘못된 결정이다 4.4% + 대체로 잘못된 결정이다 8.2%)에 불과했다. 모름/무응답은 2.9%였다.

[그림1] 대법원의 존엄사 허용 판결에 대한 찬반 응답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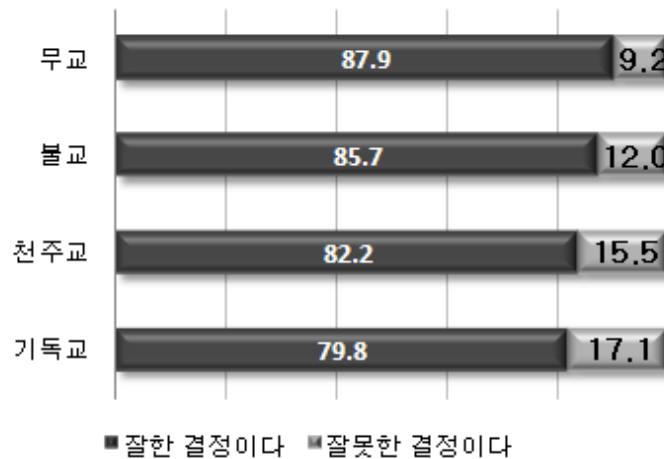


이번 결정에 대한 종교계의 반발과 철학적 논쟁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사이에서

II. 현안조사

는 종교나 이념적 입장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우선 종교에 따른 차이도 뚜렷하지 않았다. 개신교 신자가 다른 종교신자들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대법원의 존엄사 허용판결이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비율이 79.8%나 된다. 천주교는 82.2% 그리고 불교에서는 85.7%였다. 물론 믿는 종교가 없다고 답한 층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87.9%로 가장 높았다. 믿는 종교의 차이와 더불어 종교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긍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림2] 종교에 따른 대법원의 존엄사 허용 판결에 대한 찬반 응답비율 (%)



주 : 모름/무응답 제외

사회경제적 차원에서도 인식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연령대, 성별, 학력 그리고 이념은 이번 판결에 대한 찬반 인식에 있어 중요한 변수는 아니었다. 우선, 연령대의 경우 만 19세와 29세에서는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비율이 73.7%였다. 30대에서는 83.5%였다. 40대와 50대에서는 각각 91.8%와 86.8%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체적으로 30대 이하에서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이 40대 이상에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다고는 할 수 있다. 고령층일수록 무의미한 생명연장보다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젊은 연령대에서조차 80%가량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는 점에서 연령대 간 인식의 차이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게 한다.

성별 역시 마찬가지다.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비율에 있어 남성은 83.3%였고 여성은 85.7%였다. 잘못된 결정이라는 응답에 있어서도 남성은 12.7% 그리고 여성은 12.4%였다.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결과이다. 학력에서도 중졸 이하의 학력에서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비율인 84.3%로 높았다. 전문대 재학 이상에서도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비율은 83.0%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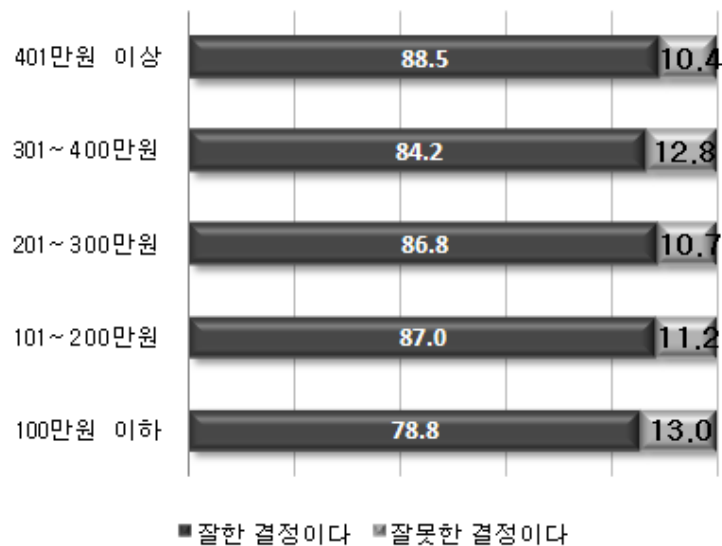
이념에서도 경향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자신의 이념성향을 진보라고 답한 경우든 보수라고 답한 경우든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압도적이었다. 진보는 83.2% 그리고 보수는 83.4%였다. 중도는 86.1%였다. 미국 등에서 보수층일수록 낙태나 존엄사 문제

II. 현안조사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진보층일수록 긍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존엄사 문제는 이념적 정체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

한편, 존엄사가 연명치료의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기 힘든 계층을 중심으로 손쉽게 생명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경제적인 변수가 존엄사에 대한 태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실제로 월 평균 가구소득수준에 따라 응답비율을 비교해보면 대법원 결정에 대한 응답차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오히려 100만원 이하의 상대적 저소득층에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잘한 결정이다 78.8%, 잘못된 결정이다 13.0%). 401만원 이상의 상대적 고소득층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다(잘한 결정이다 88.5% + 잘못된 결정이다 10.4%).

[그림3] 소득에 따른 대법원의 존엄사 허용 판결에 대한 찬반 응답비율(%)



주 : 모름/무응답 제외

II. 현안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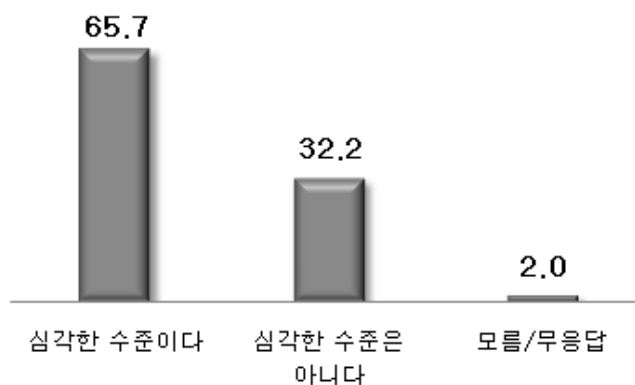
정부의 도심 대규모 집회 불허방침과 불법/폭력시위 심각성 인식

1. 우리나라 불법/폭력시위 심각성 인식

: 심각한 수준이다 65.7% vs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32.2%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불법/폭력시위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불법시위의 수준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응답비율은 65.7%(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29.6% + 대체로 심각한 수준이다 36.1%)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응답비율 32.2%(전혀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3.6% + 그다지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28.6%)보다 두 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2.0%였다.

[그림1] 불법/폭력시위의 심각성에 대한 응답비율 (%)



불법/폭력시위의 심각성에 대한 체감도는 성, 연령 그리고 학력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우선, 성별로는 여성들의 심각하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여성들은 74.4%가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응답비율은 23.5%에 불과했다. 반면, 남성들은 56.9%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41.2%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응답했다.

연령의 경우, 30대와 40대에서 불법/폭력시위의 수준에 대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심각하다는 응답이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30대에서는 심각하다는 응답비율이 56.1%였다. 40대에서는 55.9%가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30대와 40대에서는 각각 43.4%와 43.0%의 응답비율을 보였다. 오히려 가장 젊은 층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에서는 심각하다 61.3%,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38.7%였다. 20대가 30,40대에 비해 불법/폭력시위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50대 이상에서는 심각하다는 응답비율이 80.9%로 매우 높았다. 50세 이상에서는 전체평균이 65.7%보다 15.2% 포인트(P)나 높은 비율로서 불법/폭력시위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50세 이상에서는 14.3%만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답했다. 불법/폭력시위의 수준을 바라보는 연령대별 차이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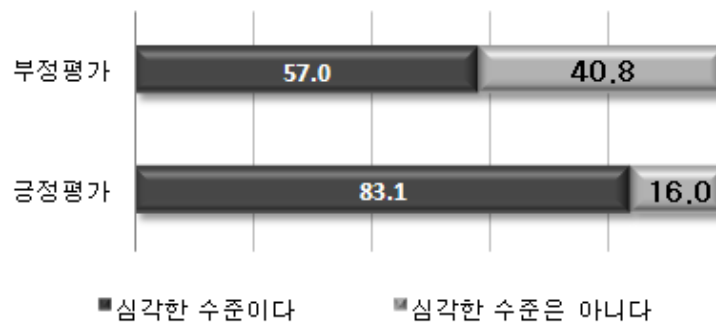
학력에서도 차이는 나타난다. 상대적으로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불법/폭력시위

II. 현안조사

를 바라보는 우려의 시각은 높았다. 중졸 이하에서는 76.9%가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14.9%에 머물렀다. 고졸에서는 65.9% 그리고 전문대 재학 이상에서는 62.7%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졸에서는 31.7%로 높아지고 전문대 재학 이상에서는 37.1%로 다시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50대 이상의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들이 우리 사회의 불법/폭력시위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동시에 전문대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30대와 40대 남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덜 우려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심각성 인식은 성, 연령 그리고 학력에 따른 차이와 더불어 국정지지도, 지지정당 그리고 이념에 따라서도 비교적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우선 국정지지도의 경우, 긍정적인 평가에서는 심각하다는 응답비율이 83.1%에 이르고 있었다. 부정적인 평가에서는 57.0%였다. 심각하지 않다는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경우 16.0%였지만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경우 40.8%였다.

[그림2] 국정운영 평가에 따른 불법/폭력시위의 심각성에 대한 응답비율 (%)



주 : 모름/무응답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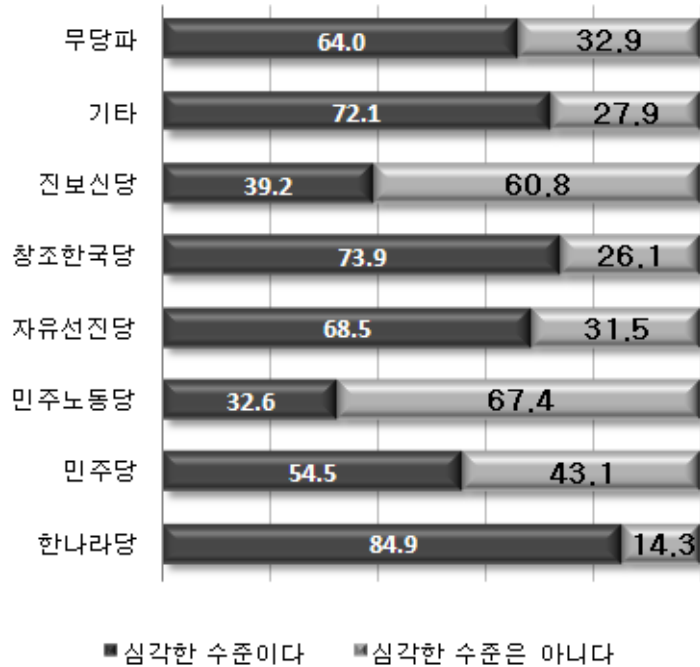
지지정당별로도 역시 비교적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한나라당 지지자들일수록 불법/폭력시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응답비율이 84.9%로 높았다.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54.5%가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노동당 지지자들 중 심각한 수준이라는 응답비율은 32.6%였다. 한국의 시위문화에 대한 평가조차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파들의 경우 기존 정당 지지자들과는 달리 정치적 이해관계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평균적인 보통 국민들의 여론을 읽는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통 국민들이 체감하는 폭력/불법시위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과반수를 훌쩍 넘는 64.0%였다.

이념 정체성 역시 불법/폭력시위의 심각성을 바라보는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념적으로 보수라고 답한 국민들 중 75.9%가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중도에서는 69.9%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진보에서는 51.3%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보수층일수록 기존 법질서의 준수와 과도한 집단행동에 부정적인 반면 진보적 이념층일수록 기존 질서에 대한 비판과 저항권을 강조한다는 가설이 현실적으로 타당함을 보여

II. 현안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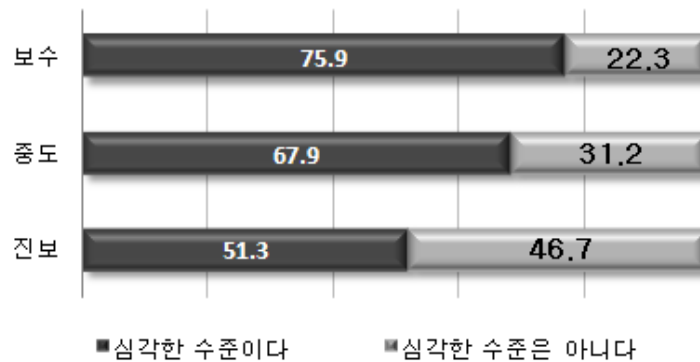
준다.

[그림3] 지지정당에 따른 불법/폭력시위의 심각성에 대한 응답비율 (%)



주 : 모름/무응답 제외

[그림4] 이념성향에 따른 불법/폭력시위의 심각성에 대한 응답비율 (%)



주 : 모름/무응답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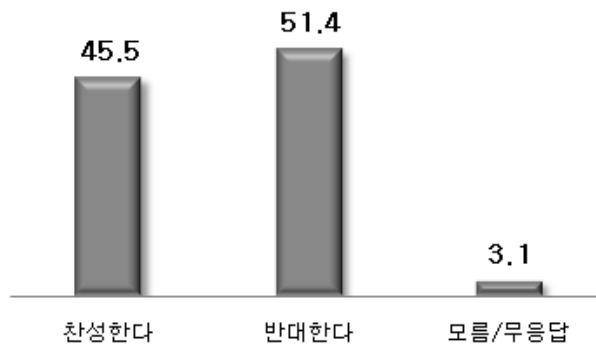
II. 현안조사

2. 정부의 도심에서의 대규모 집회 불허방침 찬반입장

: 도심에서의 대규모 집회 불허 정부방침, 찬성 45.5% vs 반대 5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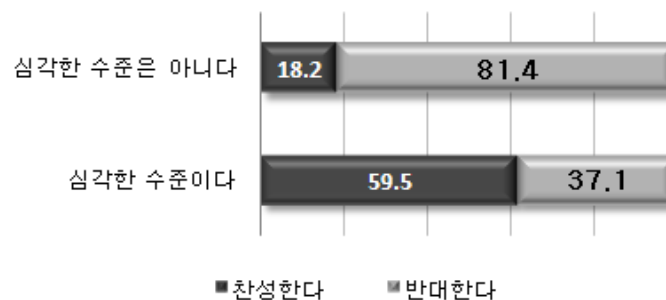
정부는 지난 16일 대전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대규모 도심 집회 불허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의견은 반대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양분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우선, 정부방침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비율은 45.5%(적극 찬성한다 25.0% + 대체로 찬성한다 20.5%)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비율은 51.4%(적극 반대한다 23.8% + 대체로 반대한다 27.8%)였다. 모름/무응답이 3.1%였다.

[그림1] 도심 대규모 집회 불허방침에 대한 찬반 응답비율 (%)



우리나라의 불법/폭력시위의 수준이 심각하다고 대답한 경우에서 정부의 도심 대규모 집회 금지방침에 찬성하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답한 경우에서 정부방침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더욱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한 경우 중 59.5%가 도심 대규모 집회 금지방침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비율은 37.1%였다. 반면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경우에는 정부방침에 찬성한다는 응답비율은 18.2%에 불과했다. 반대한다는 경우는 81.4%로 매우 높았다.

[그림2] 불법/폭력시위 인식에 따른 정부방침 찬반 응답비율 비교 (%)



주 : 모름/무응답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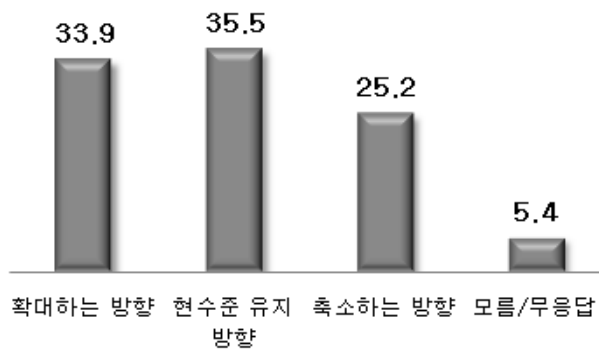
II. 현안조사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에 대한 정책방향 인식

: 확대 33.9%, 현 수준 유지 35.5% 축소 25.2%

현재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에 대해 우리나라민들은 현재 수준 유지나 확대하는 방향을 주문했다. 현재 수준 유지라는 응답비율은 35.5%였고 확대는 33.9%(대폭 또는 전면 확대하는 방향 12.3% + 일부 확대하는 방향 21.6%)였다. 축소라는 응답비율은 25.2%(대폭 또는 전면 중단하는 방향 12.8% + 일부 축소하는 방향 12.5%)였다. 모름/무응답은 5.4%였다.

[그림1]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인식 응답비율 (%)



이와 같은 결과는 동일한 문항을 가지고 물어본 3월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확대가 축소보다 증가폭이 컸다. 확대의 경우 3월 조사에서는 29.2%였으나 이번 5월 조사에서는 33.9%였다. 축소는 24.8%에서 25.2%였다. 확대의 응답비율은 현 수준 유지에서 이동한 바가 크다. 현 수준 유지를 주문하는 응답비율은 3월 조사에서는 41.5%였으나 5월 조사에서는 35.5%로 -6.0% 포인트(P)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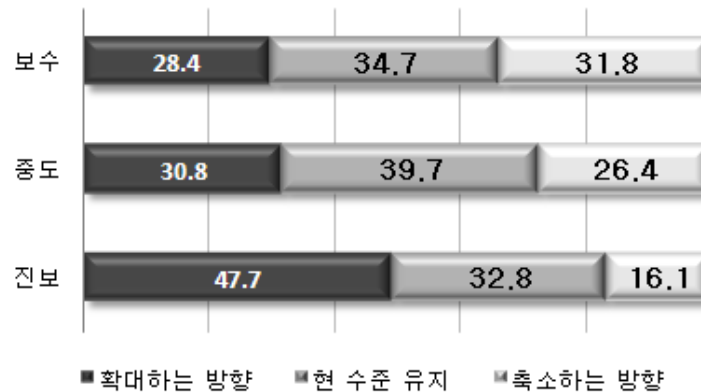
[3월 조사와 5월 조사 결과비교] (%)

	3월	5월	5월-3월
확대하는 방향	29.2	33.9	4.7
현수준 유지 방향	41.5	35.5	-6.0
축소하는 방향	24.8	25.2	0.4
모름/무응답	4.5	5.4	0.9

그러나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은 여전이 우리사회 이념적 성향을 가르는 중요한 바로미터였다. 이념적 진보에서는 확대하는 방향을 주문한 응답비율이 47.7%였다. 중도에서는 30.8%였고 보수에서는 28.4%였다. 현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진보의 경우 32.8%, 중도는 39.7% 그리고 보수는 34.7%였다. 반면 축소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진보에서는 16.1%에 불과했지만 중도와 보수에서는 각각 26.4%와 31.8%였다.

II. 현안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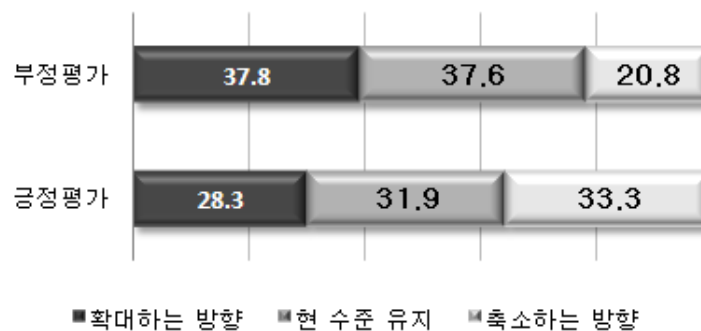
[그림2] 이념성향에 따른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인식 응답비율 (%)



주 : 모름/무응답 제외

이념성향이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의 중요한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하듯이 국정운영 평가와 지지정당 역시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을 바라보는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운영평가가 긍정적인 경우에는 확대를 주문하는 응답비율은 28.3%였다. 국정운영평가가 부정적인 경우에는 37.8%였다. 반면 축소하라는 주문이 경우, 긍정평가에서는 33.3%였지만 부정평가에서는 20.8%로 12.5% 포인트(p)가 줄어들었다. 현 수준 유지의 경우 긍정평가에서는 31.9% 그리고 부정평가에서는 37.6%였다.

[그림3] 국정운영평가에 따른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인식 응답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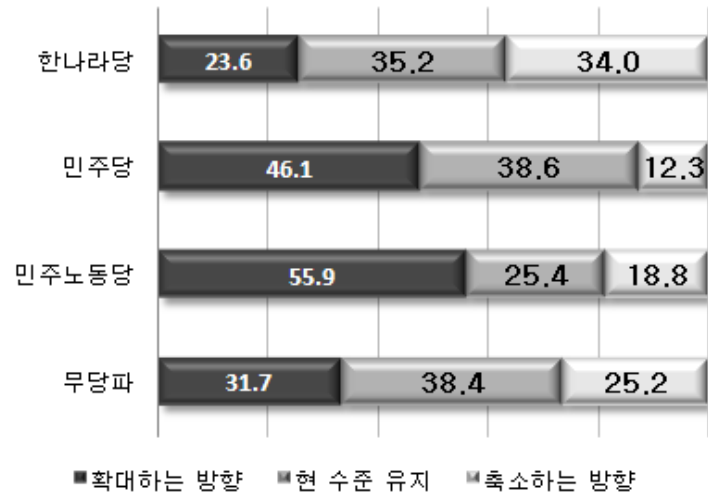
주 : 모름/무응답 제외

지지정당 역시 차이를 드러내는 기준이 된다.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경우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을 확대하라고 주문하는 응답비율은 23.6%였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자들의 경우 46.1%가 확대하라는 입장이다. 민주노동당 지지자들도 55.9%가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무당파들은 31.7%의 응답비율을 보였다. 축소의 경우에 있어서도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34.0%의 응답비율을 보였다. 민주당에서는 12.3% 그리고 민주노동당에서는 18.8%였다. 현 수준 유지에 있어서 한나라당은 35.2%, 민주당은 38.6% 그리고 민주노

II. 현안조사

동당은 25.4%로 나타났다.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이 국정지지와 지지정당에 따라 입장 차이가 달라진다는 것은 결국 대북정책이 정치권 내에서 정쟁의 소재가 될 것이라는 점과 함께 국민적 차원에서도 남남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림4] 지지정당에 따른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인식 응답비율 (%)



주 : 모름/무응답 제외

II. 현안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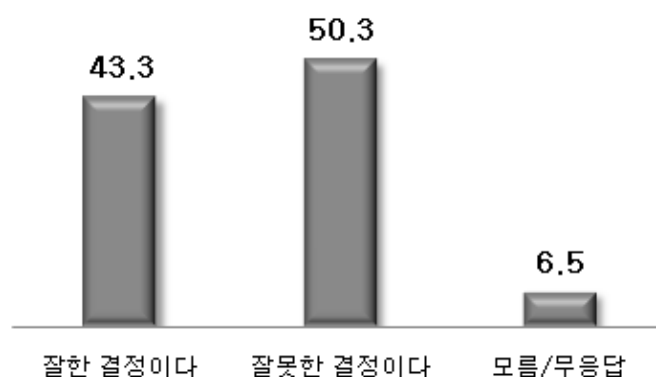
정부의 10시 이후 학원수업 금지 계획 백지화에 대한 입장

: 잘한 결정이다 43.3% vs 잘못된 결정이다 50.3%

정부와 여당은 밤 10시 이후 학원수업을 금지하려던 계획을 취소한 바 있다. 현 정부 들어서는 미래기획위원회의 제기로 논란이 촉발된 것은 사실이지만 2007년 8월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이 청소년의 건강과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 각급 시도 의회에 밤 10시 이후 진행되는 학원의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었다. 밤 10시 이후 학원수업 금지가 어제 오늘의 사회적 쟁점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오래된 쟁점인 만큼 그 골도 깊다. 이에 따라 학원교습 시간제한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상태이다. 헌법소원을 낸 고교생과 학부모들은 "청소년의 건강보호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해도 현 입시체제에서 야간자율학습과 개인 과외교습 등이 있어 학원 교습시간 제한이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오는 7월 9일 학원의 수업 운영 시간을 제한한 서울시와 부산시의 조례가 위헌인지를 놓고 공개변론을 연다고 밝힌 상태이다.

국민들의 대체적인 분위기 역시 비교적 팽팽하다. 국민들의 50.3%는 이번 백지화가 잘못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잘한 결정이라는 입장은 43.3%였다. 모름/무응답은 6.5%였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여당의 결정에 대해 국민들의 입장이 나뉘지만 대체로 학원수업에 대해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밤 10시 이후 학원수업 금지가 어렵다면, 다른 대책을 통해서라도 학원수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일단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1] 10시 이후 학원수업 금지 백지화에 대한 입장 (%)



밤 10시 이후 학원수업 금지 백지화에 대해서는 학력이나 소득에 따른 차이는 미미했다. 잘한 결정이다에 대해서는 중졸 이하의 학력에서는 43.2%, 고졸에서는 42.8% 그리고 전문대 재학 이상에서는 43.1%의 응답비율이 나타났다. 잘못된 결정에서도 학력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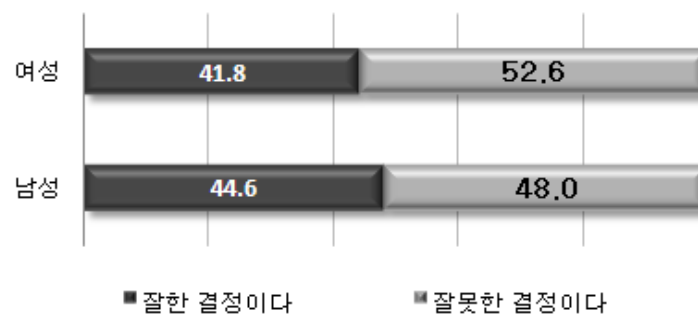
II. 현안조사

따른 차이는 드러나지 않았다. 중도 이하에서는 50.1%, 고졸에서는 48.9% 그리고 전문대 재학 이상에서는 51.7%였다.

소득 격차 역시 큰 변수가 되지는 않았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서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비율은 46.1%였다. 100만원대에서는 48.6%, 200만원대 41.1%, 300만원대 37.3% 그리고 400만원대 이상에서는 43.2%였다. 잘못된 결정의 경우 100만원 이하에서 48.1%, 100만원대 48.3%, 200만원대 50.0%, 300만원대 55.7%, 400만원대 이상 51.1%의 응답비율을 보였다.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대에서 가장 부정적인 응답비율이 높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성 그리고 연령대에 따라서는 일부 차이점이 나타났다. 우선, 성별에 따라 비교하여 보면 여성들이 이번 결정에 대해 잘했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남성들보다 높았다. 여성들 중 44.6%는 잘한 결정이라고 답했다. 남성들은 41.8%였다. 잘못된 결정이라는 반응에 있어서도 여성들의 응답비율은 52.6%로 남성들의 48.0%보다 4.6% 포인트(P) 높았다.

[그림2] 성별에 따른 10시 이후 학원수업 금지 백지화에 대한 입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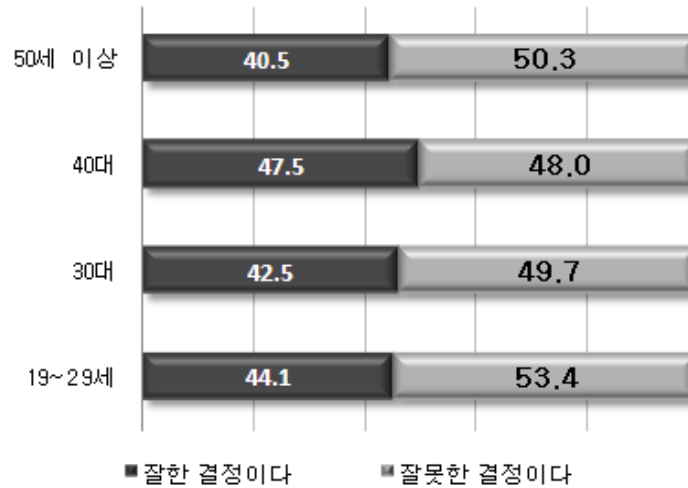


주 : 모름/무응답 제외

연령대 역시 결과에 차이를 나타나게 하는 변수라고 볼 수 없다. 우선 40대 중 47.5%가 밤 10시 이후 학원수업 금지 백지화를 잘한 결정이라고 응답했다. 잘못된 결정이라는 48.0%와 팽팽하게 맞서는 결과이다. 만 19세와 20대에서는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비율이 44.1%였다. 잘못된 결정이라는 응답비율이 53.4%였다. 30대에서는 각각 42.5%와 49.7%였다. 50세 이상에서는 각각 40.5%와 50.3%였다. 자녀가 학원수업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40대가 밤 10시 이후 학원수업 금지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II. 현안조사

[그림3] 연령대에 따른 10시 이후 학원수업 금지 백지화에 대한 입장 (%)



주 : 모름/무응답 제외

반면, 국정지지도나 이념 그리고 지지정당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우선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경우에서 이번 결정을 잘한 결정이라고 응답비율은 46.3%였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42.3%였다. 이념적으로 진보라고 답한 경우에는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비율이 42.7%였다. 보수에서는 46.2%였다. 중도에서는 42.5%였다. 정당지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경우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비율이 48.2%였다. 민주당은 46.3%였다. 민주노동당은 29.8%였다. 결과적으로 다른 쟁점현안들에 비해 교육현안에 있어서만큼은 국정지지도, 이념 그리고 지지정당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다는 의미다. 최소한 교육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관점에서 교육현안에 접근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교육문제에 대한 지나친 정치적 접근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III. 추적조사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정국변화 조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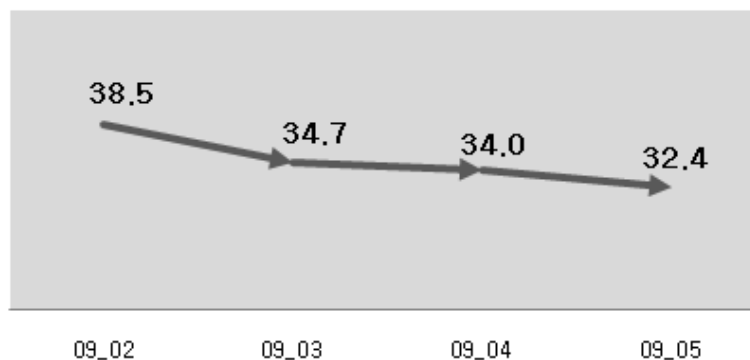
1. 대통령 지지율 변화

- : 이 대통령지지율 추이 38.5%(2월)->34.7%(3월)->34.0%(4월)->32.4%(5월)
- :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에서 MB 지지율 높아
 - 50대 이상(47.7%), 월소득 100만원 이하(49.1%), 중졸(40.6%)/고졸(38.7%)
 - 이념적 보수층(41.9%), 대구/경북(51.2%)에서 평균 크게 웃돌아
- : 부산/경남지역 MB 지지율 급락 27.3%, 전월(36.0%) 대비 8.7%p(▼) 하락

이번 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지지와 정당지지율을 살펴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완만한 하락세를 보여준 반면 정당지지율에서는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보다 크게 하락하고 있으며 민주당 지지율의 반등현상이 확인된다. 이번 조사의 경우 지난 4월 조사 이후 4.26를 보궐선거에서 현 여당이 충격적인 0:5 패배를 겪고, 양당 공히 지도부 교체 등 정치적 변화 와중에 실시된 조사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향후 정국의 뇌관이 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직후 실시한 조사라는 점에서 이후 정국의 향방을 미리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 대통령 국정지지율의 경우 2월 첫 정기조사에서 38.5%를 기록한 이래 3월 조사에서는 34.7%, 4월 조사에서는 34.0%였고 이번 조사에서 32.4%였다. 전체적으로는 완만한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정치적 악재들을 고려하면 꾸준히 30%대 전후의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여야 정치적 경색 국면이 강화되면서 결집된 보수층이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지지기반으로 작용하면서 급격한 지지율 하락을 상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또한 경제위기가 여전히 국민들의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추가 지지를 막는 상황적 요인으로 보인다.

[그림1] 이명박 대통령 국정지지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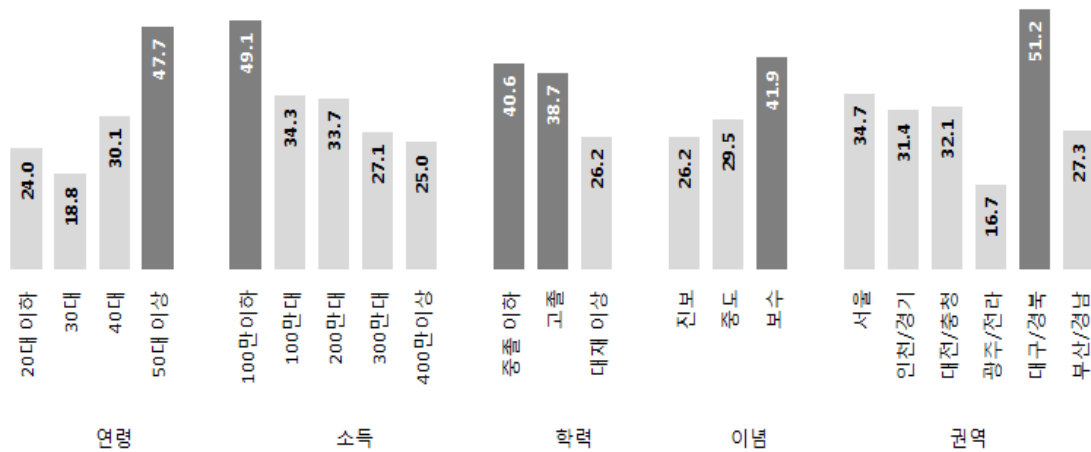


III. 추적조사

실제로 지난 4월 조사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조사에서도 전통적인 보수층이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음이 확인된다. 50대 이상(47.7%) 고연령층, 월소득 100만원 이하 저소득층(49.1%), 중졸(40.6%)/고졸(38.7%), 이념적으로는 스스로는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주관적 보수층(41.9%), 지역적으로는 대구/경북(51.2%)에서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주목할 점은 지난 4월 조사에서 36.0%의 지지를 받아 평균수준의 이대통령 국정지지율을 기록했던 부산/경남지역 유권자들의 지지율 하락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번 5월 조사에서 27.3%로 전월 대비 8.7%p나 하락했다. 이는 재보궐 선거 전후 친이 대 친박 갈등이 재현되고 특히 친박계 김무성 의원 원대대표카드가 무위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부산/경남 지역의 친박 지지층의 이탈이 가속화된 결과로 추측된다.

[그림2] 연령/월소득/학력/이념성향/지역별 이명박 대통령 국정지지 (%)



III. 추적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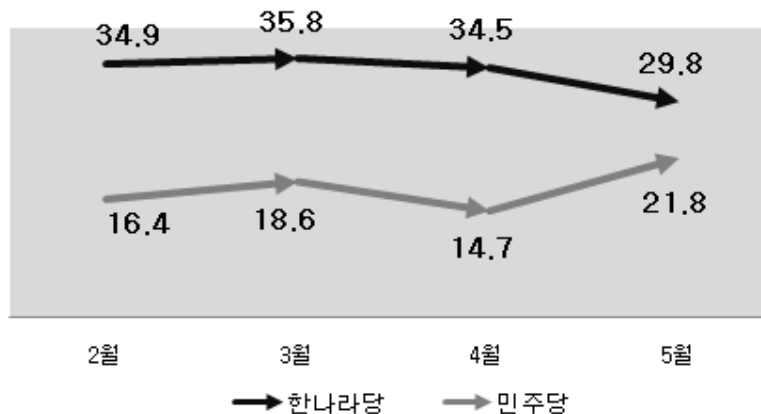
2.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지격차 8%p, 지지율 변화 시작

: 한나라당 지지율 하락, 34.9%(2월)→ 35.8%(3월)→ 34.5%(4월)→ 29.8%(5월)

: 민주당 MB정부 출범이래 첫 20%대 진입: 16.4%→18.6%→14.7%→21.8%

한편 정당지지율에서는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2월 조사에서 34.9%, 3월 조사에서 35.8%, 4월 조사에서 34.5%로 안정적인 정당지지를 기록했던 한나라당 지지율이 5월 조사에서 29.8%로 감소했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이명박 정부 출범이래 처음으로 20% 지지율을 돌파함으로써 5월 23일 현재 양당 간 격차는 8%p까지 좁혀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이 끝난 5월 30일 한겨레신문조사에 따르면 한나라당 지지율이 18.7%, 민주당 지지율이 27.1%를 기록하면서 지지율 역전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 한나라당-민주당 정당지지율 변동(2009년 2월-5월) (%)



[표1] 정당지지율 변동(2009년 2월-5월) (%)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 선진당	민주 노동당	창조 한국당	진보신당	기타	무당파
2월	34.9	16.4	2.7	6.7	1.5	2.5	3.1	32.2
3월	35.8	18.6	4.0	7.1	3.5	2.8	2.2	25.9
4월	34.5	14.7	3.1	6.8	1.8	2.9	2.1	34.0
5월	29.8▼	21.8▲	4.2	6.4	1.2	2.2	3.1	31.2

III. 추적조사

： 4월에 비해 민주당 전통적 지지기반 복원 두드러져

- 4월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기반(진보층, 20-30대)에서도 한나라당이 앞서
- 5월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기반 탈환, 진보층 및 20-30대에서 민주당이 앞서
- MB 부정평가 층에서 민주당 지지 27.4%. 전월 20.1%에서 7.3%p증가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정서 및 우호적인 여론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특히 과거에 이탈했던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의 재결집 현상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또한 한나라당이 보궐선거 직후 친이 대 친박의 내분이 격화된 양상으로 치달은 반면, 민주당의 경우 보궐선거 및 원내대표 경선을 성과적으로 치루면서 지지층 결집의 토대를 마련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난 4월 조사에서만 보더라도 이명박 국정지지에 부정적인 층에서만 민주당 지지율이 20.1%, 한나라당 지지율이 17.1%로 약간 우세했을 뿐 이념적 진보층(한나라당 지지 22.4%, 민주당 지지 20.8%), 젊은 세대(20대 한나라 지지 26.5%, 민주당 지지 19.0%; 30대 한나라당 지지 21.9%, 민주당 지지 17.9%) 등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에서조차 한나라당의 지지가 민주당 지지보다 우세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진보 층에서 한나라당 지지 20.1%, 민주당 지지가 26.4%였고, 20대에서는 한나라당 지지 19.6%, 민주당 지지 28.6%, 30대에서도 한나라당 지지 19.6%, 민주당 지지 25.3%로 지지율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표2] 한나라당-민주당 지지기반 변화 (%)

		이념성향			세대				MB 국정평가	
		진보	중도	보수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긍정	부정
4월	한나라	22.4	34.6	45.2	26.5	21.9	23.9	54.1	67.9	17.1
	민주당	20.8	13.8	12.1	19.0	17.9	16.0	9.3	5.1	20.1
5월	한나라	20.1	28.8	38.4	19.6	19.6	25.9	44.9	57.7	16.1
	민주당	26.4	21.7	19.4	28.6	25.3	22.3	15.1	11.0	27.4

이러한 지지율 역전현상이 일시적 현상으로 그칠 지 아니면 한나라당 독주체제의 종식으로 공고화될 지는 추후 정국변화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이 새로운 지지층의 영입보다는 전통적인 지지기반을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으며 한나라당 역시 전통적인 지지층의 결집이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조정국면을 거쳐 이후 상호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변수는 현재 여야 정당과 거리를 두고 있는 무당파 층에 있다. 현재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지난 4월 조사결과 분석에서도 확인한 바 있지만 현재의 무당파 층은 무색무취하게 무관심한 층이라기 보다는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는 가운데 대안을 찾지 못해 표류하는 비

III. 추적조사

중이 커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나 여당에서 돌발적인 악수를 둘 경우 무당파 층이 급격하게 현 야당의 지지기반으로 이탈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과 정부로서는 보다 정국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민심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는 데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으로서는 현재의 지지율 상승이 노대통령 서거로 형성된 반 한나라당 정서에 기대고 있으며 주로 과거 이탈했던 지지층의 복귀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대안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당 혁신 노력이 병행되어야 현재 지지율 상승이 지지기반의 확대와 공고화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

[조사개요]

모집단	●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표본크기	● 800명
표본추출	● 2008년 12월 31일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맞게 무작위 추출
표집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5\%$
조사방법	●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
응답율	● 11.9%
조사기간	● 2009년 5월 23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